

---

#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

---

2025. 8. 29.



행 정 안 전 부



# 목 차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 .....   | 1  |
| 1. 지방세제 정책 여건 .....           | 1  |
| 2. 지방세제 개편 추진 경과 .....        | 2  |
| II. 2025년 지방세제 개편 기본방향 .....  | 3  |
| III.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상세내용 ..... | 4  |
| 1. 국가 균형발전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) 지역 경제 회복 촉진 .....          | 5  |
| 2) 지방 부동산 활성화 .....           | 8  |
| 3) 투자·고용 촉진 .....             | 9  |
| 2. 민생경제 안정                    |    |
| 1) 출산·양육 지원 .....             | 11 |
| 2) 서민·취약계층 지원 .....           | 12 |
| 3) 생활 및 물가 안정 .....           | 13 |
| 3.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            |    |
| 1) 납세자 권익 보호 .....            | 14 |
| 2) 국민 편의 증진 .....             | 15 |
| 4.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                |    |
| 1)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.....         | 16 |
| 2) 공정 과세 구현 .....             | 17 |
| IV. 세수효과 .....                | 18 |
| V. 추진일정 .....                 | 18 |

# I. 지방세제 정책 여건 및 추진 경과

## 1 지방세제 정책 여건

### □ [경제 여건] 소비·수출 등 개선 예상되나 대외 불확실성 지속

- **(대내경제)**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회복세에 있으나, 건설경기 위축과 가계부채 부담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어려움
  - 다만,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경 등 신속 집행,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소비·지역경제 등 내수 활성화 계기 마련

※ 수출 증가율(전년동기비, %) ('25.1/4) △2.3, (4월) 3.5, (5월) △1.3, (6월) 4.3, 민간 소비(전기비, %) ('24.1/4) 0.5, (2/4) 0.0, (3/4) 0.4, (4/4) 0.2, ('25.1/4<sup>p</sup>) △0.1

- **(대외경제)** 미국 관세부과 등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·성장 둔화 우려
  -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 중으로 對美 관세 협상 후속 조치 등 통상 리스크 대응 필요

### □ [재정 여건] 재정수요 지속 증가로 세수 부족 우려

- **(지방세입)** 부동산 경기<sup>1)</sup> 일부 회복, 지방소득세와 연계된 소득세·법인세 규모 증가<sup>2)</sup> 등으로 지방세수<sup>3)</sup>는 다소 증가

1) 주택 매매거래량(만건): ('25.1월) 3.8, (2월) 5.1, (3월) 6.7, (4월) 6.5, (5월) 6.3, (6월) 7.3  
2) '25년 6월 누계 국세수입 : 190.0조(전년 동기 168.6조 대비 21.5조(12.7%) ↑)  
3) '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 : 55.6조(전년 대비 +4.7조, 진도율 48.3%(전년 대비 2.3%↑)

- **(재정수요)**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, 민생 회복,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

➡ 국가 균형 성장,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·실용적 지방세 정책 추진 필요

## 2 지방세제 개편 추진 경과

□ **(의견수렴)** 납세자 눈높이에서 다양한 제도개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

- (개정건의) 복잡해지는 조세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치단체, 관계부처, 지방세 관련 학·협회, 전문가 등의 제도개선 수요 조사\*

\* '25년 지방세제 개편 및 세정운영 개선 요구과제 총 1,047건 접수

- (건의사항 검토) 개정건의에 대해 자치단체, 지방세연구원 등이 함께 실현 가능성, 필요성 등을 검토·논의, 지방세제 개편안 마련

| 사전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반과제 토론회(1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점과제 토론회(2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체 건의 과제(1,047건)의 중복여부, 타법 관련성 등 자체 검토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전체 과제(1,047건)에 대해 개정 필요성, 개선 방향 등 분과별 합동 토론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① 1차토론회 선정과제, ② 세정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추가 과제 심층 토론</li> </ul> |

- (심층 논의) 법령마다 주요 개정 과제에 대해 내부심의회를 통해 심층적으로 타당성·효과성 등 검토

※ 지방세입 관계법령에 대한 개정 취지 및 필요성, 타법과의 연계성, 개정 조문안 등

□ **(지방세 지출 정비)** 일몰연장, 신설·확대 건의 등에 대해 지방세 특례 원칙·법정 절차에 따라 검토, 지방세 지출 재설계

- 「지방세 지출 기본계획」 수립·국무회의 의결, 각 부처 통보(2.26.)
- 관계부처 지방세 감면 연장 및 신설 건의 수렴(~3.31.)
- 감면액이 100억원 이상인 감면 신설·확대, 연장 건의 등에 대해 조세전문기관 예비타당성조사(신설·확대)·심층평가(연장) 수행(2~6월)
- 지방자치단체 통합심사 실시(지자체·지방세연구원, 5.19.~21.)

### < '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 >

- 지방세 비과세·감면을 목표 관리('25년 13.0%) 하에 연 1.2조원 지출 재설계
  - 신설·확대(5,311억원), 연장(3,521억원), 종료·재설계(2,864억원)

## Ⅱ. 2025년 지방세제 개편 기본방향

### 정책 목표

국가 균형발전, 민생 안정을 위해 실용적인 세제지원

### 추진 과제

#### 국가 균형발전

- 지역 경제 회복 촉진
- 지방 부동산 활성화
- 투자·고용 촉진

#### 민생경제 안정

- 출산·양육 지원
- 서민·취약계층 지원
- 생활 및 물가 안정

+

### 기반 마련

####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- 납세자 권익 보호
- 국민 편의 증진

####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- 지방세 제도 합리화
- 공정 과세 구현

- ❖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·고용 촉진, 지방 부동산 활성화, **국가 균형발전**
- ❖ 출산·양육, 서민·취약 계층, 물가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**민생경제 안정**
- ❖ 납세자 권익 보호, 편의 제고 등 **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**
- ❖ 지방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**공정 과세 구현**

### Ⅲ. 2025년 지방세제 개편 상세 내용

#### 〈 주요 개정내용 〉

#### 1. 국가 균형발전

##### 지역 경제 회복 촉진

-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
-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·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
-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 **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(8.14.)**
-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##### 지방 부동산 활성화

-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 **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(8.14.)**
-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

##### 투자·고용 촉진

-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
-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
- 국가전략기술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확대
-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방세 지원 연장

#### 2. 민생경제 안정

##### 출산·양육 지원

- 생애 최초 및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재설계
-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

#####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-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추가
-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- 근로자·장애인 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

##### 생활 및 물가 안정

-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
-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
-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

#### 3.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##### 납세자 권익 보호

-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
- 주택 취득 후 중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절차 개선
-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
-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적용 범위 확대

##### 국민 편의 증진

-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연장
-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

#### 4.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##### 지방세 제도 합리화

-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
-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합리화

##### 공정 과세 구현

-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적용기준 개선
-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

## 1

## 국가 균형발전

## 1) 지역 경제 회복 촉진

□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더 큰 감면 지원(특례법)

- (산업·물류·관광단지) 지역별 중점산업 조성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<비수도권<인구감소지역 순으로 높은 감면을 적용

| 구 분         |     | 현 행  |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산업단지        | 시행자 | 수도권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| 수도권    | 취득세 15%<br>재산세 15% | △20%p<br>△20%p |
|             |     | 비수도권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60%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50% | -<br>△10%p     |
|             | 입주자 | 수도권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60% | +15%p<br>-     |
|             |     | 비수도권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75% | 수도권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| △15%p<br>-     |
| 물류단지        | 시행자 |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5%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60% | -<br>△15%p    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75%<br>재산세 75% | +25%p<br>-     |
|             | 입주자 |   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수도권    | 취득세 25%<br>재산세 15% | △10%p<br>△10%p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5% | -              |
| 관광단지<br>시행자 |     |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5%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+15%p<br>+10%p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수도권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5% | △15%p<br>△10%p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-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75%<br>재산세 50% | +25%p<br>+15%p |
| 관광단지<br>시행자 |     |      | 취득세 25%            | 수도권    | 취득세 10%            | △15%p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25%            | -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인구감소지역 | 취득세 40%            | +15%p          |

- (지식산업센터·벤처기업·연구소) 수도권 집중이 높은 지식산업센터, 벤처기업,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해 비수도권 중심 감면 재설계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지식산업센터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                  | 시행자      | 수도권    | 취득세 15%<br>재산세 15% | △20%p<br>△20%p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비수도권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| -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입주자      |  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| -              |
| 벤처기업육성<br>촉진지구 내<br>벤처기업 |      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<br>(+조례 15%P 可)   | 수도권      |     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20% | △15%p<br>△15%p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수도권     |       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35% | -              |
| 기업부설<br>연구소              | ① 중소기업  | 취득세 60%<br>재산세 50%                   | 수도권      | ① 중소기업 | 취득세 45%<br>재산세 45% | △15%p<br>△ 5%p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초기 중견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50%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② 중견기업 | 취득세 30%<br>재산세 30% | △5%p<br>△5%p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 중견기업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                  | 비<br>수도권 | ① 중소기업 | 취득세 60%<br>재산세 60% | -<br>+10%p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④ 대기업 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<br>※ 과밀억제권역<br>제외 |          | ② 중견기업 | 취득세 45%<br>재산세 45% | +10%p<br>+10%p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③ 대기업  | 취득세 35%<br>재산세 35% | -              |

#### 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·사업장 신설 시 감면 확대(특례법)

-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·재산세 감면 연장 및 지역 특성에 맞게 감면 업종 확대

| 구 분          |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창업·사업장<br>신설 | 감면 | 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*<br>* 5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| 업종 | 광업, 제조업 등 32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면 업종* 확대<br>* 야영장업, 관광펜션업 등 |

□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세제지원 확대(지방세법령, 특례법)

- (세컨드 홈)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內 추가로 주택 취득 시 특례 대상 주택의 가액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지역을 확대 [건설투자 보강방안\(8.14\)](#)

< '세컨드 홈' 세제 지원 >

- (취득세) 무주택자·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1주택 구입시 최대 50% 감면(150만원 限)
- (재산세) 기존 주택에 대해 세율 인하( $\Delta 0.05\%$ ),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(43~45%) 적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|
| 인구감소지역<br><div>광역시(5개구) 外<br/>84개 지역</div>            | 주택 가액 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가액 3억원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가격 4억원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table><tr><th colspan="2">주택 가액 기준 상향</th></tr><tr><td>수도권*</td><td>비수도권</td></tr><tr><td>3억원</td><td>12억원</td></tr><tr><td>4억원</td><td>9억원</td></tr></table> <div>* 강화·용진·연천·가평</div> |          | 주택 가액 기준 상향 |  | 수도권* | 비수도권 | 3억원 | 12억원 | 4억원 |
| 주택 가액 기준 상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수도권*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수도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3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4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9억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인구감소<br>관심지역<br><div>강릉, 익산, 경주,<br/>사천 등 9개 지역</div> | < 신 설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가액 3억원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산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시가격 4억원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※ 현행 인구감소지역과 동일 수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     |      |     |

- (임대주택) 인구감소지역 內 장·단기(10·6년) 민간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 종과세 및 주택 수에서 제외 신설 [건설투자 보강방안\(8.14\)](#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구감소지역 內<br>민간임대 목적으로<br>취득하는 주택 | 종과세 적용  | 종과세 제외(~'26년)<br>※ 1년 한시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택 수 포함 | 주택 수 제외<br>※ 임대기간 限      |

- (사원용 주택)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사원에게 임대·무상제공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및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

| 구 분          | 현 행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| < 신 설 > | 취득세 50%*<br>* 법 25%+조례 25% |

## □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(특례법)

-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, 유사 제도와 형평성 고려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(최대 8년) 설정

※ (현행) 취득세·재산세 50%(조례) → (개정) 취득세 50% 재산세 50%(5년간 50% 이후 3년간 25% 조례)

## 2) 지방 부동산 활성화

### □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지방세 지원 확대(지방세법령, 특례법)

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개인 수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(~'26년)하고 취득세 증과세 제외 [건설투자 보강방안\(8.14\)](#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수분양자가 취득하는<br>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<br>※ 비수도권 소재, 전용면적 85㎡ ↓,<br>취득가액 6억원 ↓ | <신 설><br><br>주택 수 제외 | <b>취득세 50%*</b><br>* 법 25% + 조례 25%<br><b>증과세 제외(~'26년)</b><br>※ 1년 한시 |

#### < 주택 수 제외 VS 증과세 제외 세제지원 비교 >

- (주택수 제외) 신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, (기존 2주택자) 8% → 1~3%, (기존 3주택 이상자) 12% → 8%
- (증과세 제외) 기존 주택 수 관계없이 일반세율(1~3%) 적용

-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\*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증과세 제외 기간(1년) 연장

\* 기업이 부채 상환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 등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<br>증과세 제외 | ~'25.12.31. | <b>~'26.12.31.</b> |

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신축 취득세(법 25% + 조례 25%) 감면 연장(~'26년)

※ (요건) ①'24.1.10.~'26.12.31. 준공된 아파트, ②전용면적 85㎡ ↓ & 취득가액 3억원 ↓,  
③'26.12.31.까지 임대계약 체결, 2년 이상 임대계약 체결

□ 빈집 정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(지방세법령, 특례법)

- 빈집의 적극적인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,
- 신속한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주차장 등 공공 활용 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, 신축하는 주택·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

| 구 분     |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철거 후 토지 | 감면        | < 신 설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산세 50%(5년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| 재산세 부담 완화 | - 3년간 별도합산 적용<br>- 5년간 철거 前 주택세액 기준 세부담상한 계산 | 공공 활용하는 기간 전체로 확대·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축      | 감면        | < 신 설 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50%* (150만원 限)<br>* 법 25% + 조례 25%<br>※ 철거 후 3년 이내 신축 시 |

3) 투자·고용 촉진

□ 비수도권 장기근속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(지방세법령)

-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 이직 방지를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\* 과세표준 공제 신설

\* (신고·납부세액)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(과세표준) × 0.5%(세율)

| 구 분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(근로자) 식비, 학자금 등</li> <li>② (육아휴직자) 출산 전·후 휴가 기간 급여, 육아휴직 기간 급여,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</li> </ol> | <p>(추가)</p> <p>③ 3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무자 수당</p> <p>※ 1인당 월급여액의 10%(36만원 限)</p> |

### □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(특례법)

-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b>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법인</b></p> <p>— &lt; 주요 내용 &gt; —</p> <p>① (대상) 본점·지점이 인구감소지역 內 소재 법인</p> <p>② (요건)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</p> | <신 설> | <p><b>법인지방소득세</b></p> <p><b>1인당 45만원</b></p> <p><b>(중소기업 70만원)</b></p> <p><b>세액공제</b></p> <p>※ 고용한 과세연도 限</p> |

### □ 국가전략기술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대상 확대(특례법)

- 기업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 감면과 동일 수준으로 국가전략기술\* 분야 연구소 추가(15%p) 세제지원

\* 외교·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,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미래 혁신에 기반이 되는 기술(반도체·이차전지, 백신 등 7개 분야 71개 기술)

| 구 분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기업부설 연구소 | 신성장·원천기술 관련<br>15%p 추가 감면 | (추가)<br>국가전략기술 관련<br>15%p 추가 감면 |

### □ 중소기업 지원기관 지방세 지원 연장(특례법)

- 지역별 중소기업의 교육·입주 지원,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| 취득세·재산세 50%       | 감면 연장 |
|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| 취득세 50%(전통시장 75%) |       |

## 2

## 민생경제 안정

## 1) 출산·양육 지원

## □ 생애 최초 및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재설계(특례법)

- (생애최초) 신혼부부·청년층의 주거안정 지원 등을 고려하여 감면 연장하고,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감면 한도 확대

| 구 분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생애최초 구입 주택 | 취득세 100%     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한도 ① (일반) 200만원 | <좌 등>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② (소형주택) 300만원  | (추가)<br>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|

- (출산양육) 양육·주거 부담 완화 지원 등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출산·양육용 주택 | 취득세 100%<br>(500만원 한도) | 감면 연장 |

## □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 공제 신설(지방세법령)

- 일·가정 균형적인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표에서 공제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종업원분<br>주민세<br>과세표준<br>공제 | ① (근로자) 식비, 학자금 등<br>② (육아휴직자) 출산 전·후 휴가<br>기간 급여, 육아휴직 기간 급여,<br>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| (추가)<br>③ (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)<br>출산 전·후 휴가기간 급여,<br>육아휴직 기간 급여 |

## 2) 서민·취약계층 지원

### □ 공공매입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추가(특례법)

- 공공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사업\*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도 감면 대상에 추가

\* (든든전세주택)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,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%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공공매입임대주택<br>감면 대상자<br>※취득세 25%, 재산세 50% | 한국토지주택공사,<br>지방주택공사 | (추가)<br>주택도시보증공사<br>(HUG) |

### □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(특례법)

-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한국한센복지협회 및<br>사회복지법인 | 취득세·재산세·지역자원시설세·<br>25% ~100%(+ 조례 50% 可)<br>등록면허세·주민세 100% | 감면 연장 |

### □ 근로자·장애인 등 지원 공공기관 지방세 감면 연장(특례법)

- 장애인·근로자 등 지원을 위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, 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국가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 정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한국장애인고용공단,<br>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<br>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,<br>법률구조법인,<br>한국소비자원 | 취득세 25%<br>재산세 25% | 감면 연장 |
| 근로복지공단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취득세 25%            |       |

### 3) 생활 및 물가 안정

#### □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 공공기관 감면 연장(특례법)

- 농·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\*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

\*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병행 추진(「지방세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(~'26.上))

| 구 분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| 취득세 50%<br>재산세 50%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|
| 지방농수산물공사   | 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 | 감면 연장<br>※ 최소납부 유예 종료 |

#### □ 공공요금 안정화를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(특례법)

- 지방공공요금 안정적 지원을 위해 철도 관련 공공기관 감면 연장

| 구 분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국가철도공단   | 철도시설용<br>취득세 25%                  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국가귀속 부동산<br>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   | 감면 연장<br>(반대급부 有 50%) |
| 한국철도공사   | 철도사업용<br>취득세 25%<br>재산세 50%        | 감면 연장<br>(도시지역분 종료)   |
|          | 철도차량<br>취득세 50%<br>(고속철도 25%)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방도시철도공사 | 취득세 100%<br>재산세 100%<br>등록면허세 100% | 감면 연장                 |

#### □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지방세 감면 신설(특례법)

- 대형 화재 발생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숙박시설이 스프링클러 설치 시 지방세 감면\* 신설

\* 취득세 100%, 재산세 2년간 100%, 이후 3년간 50%

### 3

##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

### 1) 납세자 권익 보호

#### □ 납세자보호관의 역할 확대(기본법령)

- 납세자보호관\*이 과세전적부심사·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 시 참여·의견 제출하여 납세자를 지원하도록 역할 확대

\* 과세기관의 위법·부당한 행위를 감시·시정하기 위해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운영, 필요시 세무사, 회계사, 변호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임명 가능

| 구 분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납세자보호관<br>역할 | ① 고충민원 처리, 세무상담<br>②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<br>③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<br>④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<br>⑤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| (추가)<br>과세전적부심사 및<br>이의신청 과정에서<br>납세자 지원*<br>*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<br>심의의결 시 참여, 의견제출 |

#### □ 주택 취득 후 중과세 제외 요건 미충족 시 절차 개선(지방세법)

- 주택 취득 시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, 요건을 미충족\* 하여 중과되는 경우,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규정 신설

\* (예)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 후 3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,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 목적으로 주택 취득 후 1년 내 멸실, 3년 내 신축, 5년 내 판매하지 못한 경우 등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취득세 중과 제외<br>요건 미충족 시<br>처리방법 | (추징)<br>주택 취득일부터<br>가산세 적용 | (신고)<br>사유 발생일로부터<br>60일 이내 신고·납부<br>※ 가산세 없음 |

#### □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(징수법)

국제 반영

-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계·비품\*은 조건 없이 압류를 금지하는 등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\*\*

\* (현행) 농어업·직업용 기계·비품 등은 담보 제공 시 압류금지 → (개정) 조건 없이 압류금지

\*\* (현행) 의복·침구·가구, 식료·연료 등 → (개정) + 신체보조기구, 재해방자·보안 관련 물건 등

□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적용 범위 확대(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)

- 납부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에 대하여 체납 외 부과·징수까지 적용토록 범위 확대 및 근거 마련

| 구 분               |      | 현 행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지방<br>행정제재<br>부과금 | 적용범위 | 제한적 적용(체납) | 일반적 적용(+ 부과·징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근거규정 | <신설>       | ① 환급(지급 절차, 직권 지급)<br>② 징수유예(분할납부, 납기일 연기 등) |

## 2) 국민 편의 증진

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한 신고·납부기한 연장(지방세법)

-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연장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<br>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기한 |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<br>4개월 이내 |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<br>5개월 이내 |

□ 세무조사 등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(기본법)

국세 반영

-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
  -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등 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정통지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사전통지 기간 축소

| 구 분  | 현 행        | 개 정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세무조사 | 조사개시 15일 전 | 조사개시 20일 전  |
| 재조사  |            | 재조사 개시 7일 전 |

## 4

##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

## 1)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

## □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(지방세법)

국세 반영

-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전 구간의 세율(0.1%p) 상향 조정

\* 지방소득세는 국세(소득세·법인세)와 동일한 과표구간에 대해 국세의 10% 수준의 세율을 적용

| 구 분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|      | 개 정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일반법인               | 2억원 이하      | 0.9% | 2억원 이하      | 1.0% |
|                    | 2~200억원     | 1.9% | 2~200억원     | 2.0% |
|                    | 200~3,000억원 | 2.1% | 200~3,000억원 | 2.2% |
|                    | 3,000억원 초과  | 2.4% | 3,000억원 초과  | 2.5% |
| 성실신고확인대상<br>소규모 법인 | 200억원 이하    | 1.9% | 200억원 이하    | 2.0% |
|                    | 200~3,000억원 | 2.1% | 200~3,000억원 | 2.2% |
|                    | 3,000억원 초과  | 2.4% | 3,000억원 초과  | 2.5% |

## □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합리화(특례법)

-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감면받은 경우, 공사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'직접 사용' 개시 시점을 완화(1→2년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<br>마을회 부동산 | 취득일 1년 이내<br>직접 未사용 | 취득일 2년 이내<br>직접 未사용(신축 限) |

- 사회복지법인의 취득세 추징 사유를 개별법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및 시설 폐쇄되는 경우까지 확대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회복지법인<br>취득세<br>추징 사유 | ❶ 5년 이내 수익사업 사용<br>❷ 3년 이내 직접 未사용<br>❸ 2년 이내 매각·증여·他 용도 사용<br><br>< 신 설 > | <좌 동><br><br>❹ 3년 이내 설립허가 취소,<br>시설 폐쇄되는 경우 |

## 2) 공정 과세 구현

### □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(기본법)

국세 반영

-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체결 후 사망 시 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\*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토록 개선

\*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체납징수가 불가하나, 상속 포기 및 체납 시 보험료 납입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아 체납징수 가능

| 구 분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|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<br><br>< 신 설 > | <좌 동><br><br>① 상속재산을 일부 포기한 경우<br>② 지방세·체납처분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(피상속인 체납기간 비율 限) |

### 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 취득세 적용기준 개선(지방세법)

-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시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을 입증하더라도 지급한 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\*,  
- 과세 형평성을 위해 무상세율 적용(증여로 간주)토록 개선

\*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,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주택 등 거래 | (원칙) 무상세율(3.5%)<br>(예외) 유상세율(1~3%)<br>① 경·공매, 파산, 교환 등 취득<br>② 매매 후 대가 지급 사실 및 소득 입증<br><br><단서 신설 > | <좌 동><br><br><좌 동><br><br>지급대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무상세율(3.5%) |

### □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(지방세법)

-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매매 등 승계취득 시에도 최초로 신설 (증설 포함)하여 등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 중과세\* 적용

\* (현행) 4%(일반세율) → (개정) 12%(중과세율)

## IV. 세수효과

- '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에 따른 세수 효과는 +1,003억원
  - (증가 요인(+1,273억)) 장기 관행적 감면에 대한 감면을 조정 등
  - (감소 요인(△270억)) 인구감소지역 및 출산·양육지원 감면 확대 등

## V. 추진 일정

- (대상 법률 : 총 5개) 지방세기본법, 지방세징수법, 지방세법, 지방세특례제한법,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법
- 향후 일정
  -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: 8월 28일(목)
  - 지방세제 개편안 입법예고(24일간) : 8월 29일(금) ~ 9월 22일(월)
    - ※ 하위법령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조문 반영
  - 차관회의 : 9월 25일(목) / 국무회의 : 9월 30일(화)
  - 국회 제출 : 10월 초

## 참고 1

##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내용(요약)

※ 본문내용에 작성된 하위법령도 “참고1”에 포함하되, 하위법령과 관련된 개정안 등 구체적 내용은 하반기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 시 반영

### 1

### 지방세기본법

※ □ : 주요 개정내용(본문내용과 동일)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(안 법§42)       | ○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 반영               |
| ②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(안 법§83)                | ○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합리화*<br>* (現)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→<br>(改) 조사 시작 20일(재조사는 7일) 전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 반영,<br>납세자 권익 제고 |
| ③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강화 (안 법§86, 법§86의2 등)    | ○ 외부로 제공된 지방세 과세정보의 안정성을 확보 하도록 ‘과세정보 관리 조치 사항’ 규정 및 비밀 유지의무 위반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<br>* 과세정보 유출·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, 과세정보의 파기 등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 | 지방세 과세정보 관리체계 개선    |
| ④ 과세전적부심사의이의신청 보정요구 기간 명확화 (안 법§95)      | ○ 과세전적부심사, 이의신청 시 서식·절차 결함 또는 증명자료 미비 시 보정요구 기간 개선<br>※ (現) 20일간 → (改) 20일간(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 권익 제고           |
| ⑤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 근거 신설(안 법§100, 영§66의2) | ○ 지방세 사건도 조세심판원장과 상임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합동회의 대상* 으로 의결된 경우, 합동회의에서 심리·결정<br>* 행안부 장관이 심판청구 당사자인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합동회의를 요청하는 경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| 국세 반영               |
| ⑥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보호 업무·권한 추가 (안 영§51의2)     | ○ 납세자보호관이 마을세무사 운영,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불복청구* 심의 시 참여 및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업무·권한 범위 추가<br>*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 권익 제고           |

## 2

## 지방세징수법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최저생활 보호를 위한<br>압류금지 재산 확대<br>(안 법§40, §41, 영§46) | ○ 압류금지 재산의 조문체계 정비* 및 대상 확대**<br>* (現) 절대적·조건부 압류금지 → (改) 절대적 압류금지<br>** 신체 보조 기구, 재해 방지 또는 보안 관련 물건 | 납세자<br>권익 제고,<br>국세 반영 |

## 3

## 지방세법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유상거래 시<br>적용기준 개선(안 법§7⑪)   | ○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등을 유상<br>거래 시 그 지급대가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*<br>유상세율 적용을 배제<br>* 제도 취지 및 운영현황,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하여<br>대통령령으로 규정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|
| ② 부당행위계산 과세표준<br>산정방식 보완<br>(안 법§10의3②)          | ○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<br>경우로서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<br>시가표준액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|
| ③ 법인의 지목변경<br>간주취득 시 과세표준<br>명확화(안 법§10의6②)      | ○ 법인의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<br>알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<br>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|
| ④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<br>과세 합리화(안 법§13⑤)                | ○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<br>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형평성<br>제고 |
| ⑤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<br>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<br>보완(안 법§20② 등) | ○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<br>미충족시,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<br>중과세액을 신고·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<br>권익 제고    |
| ⑥ 시가인정액 평가 차이<br>수정신고 시 가산세 규정<br>보완(안 법§21③)    | ○ 시가표준액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에도 정확한<br>시가인정액이 확인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<br>납부지연 가산세도 면제됨을 명확히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|
| ⑦ 인구감소지역 내<br>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<br>제외 등(안 영§28조의2 등)  | ○ 장기(10년)·단기(6년) 민간등록임대 사업자가<br>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<br>제외(~'26년) 및 주택 수 제외(임대기간 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<br>권익 강화    |

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⑧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<br>(안 영§28의2 등)     | ○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*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(~'26년)<br>* 비수도권 소재, 전용면적 85㎡↓, 취득가액 6억원↓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 권익 강화     |
| ⑨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중과세 제외 연장(안 영§28의2) | ○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(CR리츠)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제외 기간을 1년 연장('25년→'26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자 권익 강화     |
| ⑩ 지방소비세 재정보전분 안분금액 위임 규정 변경(안 법§71 등)           | ○ 매년 변동되는 지방소비세 재정조정분 안분금액을 시행령이 아닌 고시로 위임하여 법령체계의 합리성 제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|
| ⑪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<br>(안 영§78의2)  | ○ 육아휴직자, 출산전·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출산·양육 지원      |
| ⑫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<br>(안 영§78의2)   | ○ 비수도권(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)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<br>※ (항목) 장기 근무(3년↑)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<br>(한도) Min(급여액의 10%, 36만원) | 비수도권 고용지원     |
| ⑬ 국세 특례 종료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<br>(안 법§93②)            | ○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 과세특례 종료에 따른 관련 인용 조문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|
| ⑭ 국외전출자 과세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변경<br>(안 법§103의3⑧)      | ○ 국외전출자의 과세대상이 확대*됨에 따라 관련 용어 변경('국내주식 등' → '주식 등')<br>* (現) 국내주식 → (改) 국내+국외주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|
| ⑮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<br>(안 법§103의19②)          | ○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 합리성 제고     |
| ⑯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(안 법§103의20①)                    | ○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.1%p 상향 조정<br>※ (現) 세율 : 0.9~2.4% → (改) 세율 : 1.0~2.5%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담 정상화       |
| 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<br>(안 법§103의23①)        | ○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<br>※ (現) 일반법인·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內 →<br>(改) 일반법인 4개월 內,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內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 제고       |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⑮ 금전매수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<br>(안 법§107②, 영§106)        | ○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(조합)로 변경<br>※ (現) 수탁자(지역·직장주택조합 限) →<br>(改) 지역·직장주택조합, 재개발조합, 정비사업 조합 등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형평성<br>제고     |
| ⑯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재산세 납세지 명확화<br>(안 법§108)                 | ○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납세지를 취득세와 동일하게 '등록지'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|
| ⑰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범위 개선(안 법§112)                    | ○ 비과세 대상 범위를 「국토계획법」에 의해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 중 공공시설을 설치·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한 토지로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    |
| ⑱ 신탁재산의 물적납세의무 범위 확대 및 규정 명확화(안 §119의2①)             | ○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신탁재산의 범위에 「신탁법」제27조에 따른 재산을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    |
| ⑳ 빈집 철거 후 공용·공공용 사용토지 세부담 추가 완화<br>(안 영§103의2, §118) | ○ 빈집 철거 후 국가·지자체와 협약하여 1년 이상 공용·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 완화 기간 확대<br>※ (現) 별도합산 3년 → <u>활용기간 전체 적용</u><br>(改) 세부담상한 특례 5년 → <u>활용기간 전체 적용</u>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    |
| ㉑ 자동차세 연납 규정 조문 정비(안 법§128③)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, 자동차세 연납 시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의 계산식을 시행령에 위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<br>제고          |
| ㉒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근거 규정 명확화(안 법§147②)               | ○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신탁재산 수탁자에게 물적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재산세 규정을 준용토록 관련 근거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|

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① 지방세 특례 범위 명확화 등<br>(안 법 §2, §4①, §75의3, §80의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특례 정의 규정을 단순 열거규정으로 명확화<br>○ 인구감소지역 정의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   |
| ②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<br>신설(안 법 §2, §185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<br>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<br>합리성<br>제고        |
| ③ 지방세 조례감면<br>감면총량 예외 규정<br>정비(안 법 §4⑦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감면규모 제한 예외 단서 규정을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   |
| ④ 법률구조법인,<br>한국소비자원에 대한<br>감면 대상 구체화<br>(안 법 §2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감면 대상의 범위를 포괄적·추상적인 고유<br>업무에서 구체적·개별적 목적사업으로 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   |
| ⑤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<br>소재 주택 구입 시 감면<br>확대 및 생애최초 주택<br>감면 상시 거주 요건<br>완화(안 법 §36의3) | ○ 생애최초로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 구입 시<br>감면 확대(200만원→300만원)<br>○ 직장이전·학업 등 부득이하게 주소 이전하는<br>경우를 감안하여 상시 거주 추정 요건 합리화<br>※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·증여, 타 용도 사용시 추정 | 납세편의<br>제고             |
| ⑥ 출산·양육 주택 취득세<br>감면규정 합리화<br>(안 법 §36-5, 영 §17-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상시거주를 감면요건에서 제외하고 사후관리<br>기간을 축소*하는 등 규정 간소화<br>* 상시 거주 3년 →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<br>제고             |
| ⑦ 신축에 대한 추정규정<br>완화(안 법 §46, §75의5,<br>§9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<br>대한 '직접사용' 개시 시점을 완화(1→2년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<br>제고             |
| ⑧ 기업도시개발구역 내<br>창업기업 등 재산세<br>감면기간 설정<br>(안 법 §75의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재산세 감면기간을 신설하여 최대 8년*으로 설정<br>* 5년간 50%, 그 다음 3년간 25% 감면(조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<br>체계<br>정합성<br>제고 |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⑨ 인구감소지역 등 창업 의미 명확화<br>(안 법 §75의4, §75의5)      | ○ 감면 대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명확화 하여 합병·분할·현물출자 등에 대해 감면 배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수도권 고용지원     |
| ⑩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정비(안 법 §84)                  | ○ 감면 대상 및 감면 제외 대상 명확화<br>- (감면 대상) 국토계획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<br>- (감면 제외)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 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 합리성 제고     |
| ⑪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추징규정 신설(안 법 §85-2)          | ○ 신축을 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추징 유예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추징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 제고       |
| ⑫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조문 정비(안 법 167의3)                 | ○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인용조문 정비<br>* 지방세법 §95④ → §95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|
| ⑬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(안 법§167의5)    | ○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 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 <div> <div>구분</div> <div>주요 내용</div> <div>대상</div> <div>본점 또는 지점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</div> <div>요건</div> <div>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</div> <div>내용</div> <div>근로자 1인당 45만원(중소 70만원) 세액공제 (고용한 과세연도 限)</div> <div>일몰</div> <div>~2028.12.31.</div> </div> | 비수도권 고용지원     |
| ⑭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(안 법 §167의6) | ○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 (세율 1.4%~3.5%)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 체계 정합성 제고 |
| ⑮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(안 법 §180의2)         | ○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과세 합리성 제고     |

| 제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①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<br>정의 명확화 (안 법§2)                    |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관계법의 범위를 행안부<br>장관이 고시하는 별표로 규정하도록 명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입<br>체계<br>명확화 |
| ② 다른 법률과의 관계<br>설정(안 법§3)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관계법에서 특별한<br>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행정<br>제재부과금법을 보충적으로 적용토록 개선<br>※ (現) 관계법에서 체납된 경우 적용<br>→ (改) <u>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하고 적용</u> | 지방세입<br>체계<br>명확화 |
| ③ 과오납금으로 인한 환급<br>관련 규정 신설(안<br>법§7의7, 영§5의16~19) |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 환급금 발생 시 환급금<br>지급 절차, 직권 지급 등 세부적인 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입<br>체계<br>명확화 |
| ④ 징수유예 및 분납 규정<br>신설(안 법 §7의9,<br>§5의12~14)       | ○ 천재지변,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의 사유로<br>납부가 곤란한 경우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<br>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납세편의<br>제고        |
| 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<br>객관성 확보(안 법 §16)                  | ○ 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체납처분 중지 시<br>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칠 수<br>있도록 규정 신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방세입<br>체계<br>명확화 |

## 참고 2

## 2025년 지방세 지출 재설계(안) 요약표

(단위 : 억원, '24년 결산 기준)

| 유형                   |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 출 액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|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| 향 후    | 증 감    |
| 합 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,699 | 11,696 | △1,003 |
| 신설확대<br>(9건)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,041  | 5,311  | 270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                      | ▶ 생애초주 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아파트 수분양자 | 4,987  | 5,106  | 119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·과학                     | ▶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시설               | -      | -      | (추정공란) |
|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·관광                     | ▶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부동산            | 3      | 18     | 15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·지역                     | ▶ 인구감소지역 주택, 빈집 철거 후 토지       | 51     | 187    | 136    |
| 연장<br>(현행)<br>(60건)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521  | 3,521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농·어업                      | ▶ 교환·분합 농지 ▶ 20톤 미만 소형어선      | 151    | 151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                      | ▶ 사회복지법인 ▶ 장애인고용공단            | 296    | 296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·과학                     | ▶ 한국환경공단 ▶ 해양환경관리공단           | 3      | 3  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구조                      | ▶ 자산공시특 PV 부동산 ▶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| 728    | 728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수송·교통                     | ▶ 도시철도공사 ▶ 수소전기화물자동차          | 260    | 260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·지역                     | ▶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▶ 이전공공기관 부동산     | 1,035  | 1,035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행정                      | ▶ 지방공사·공단 ▶ 정당 부동산            | 1,048  | 1,048  | -      |
| 연장<br>(재설계)<br>(26건)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,631  | 2,864  | △767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농·어업                      | ▶ 농어촌공사 농지매매사업 ▶ 지방농수산물공사     | 535    | 389    | △145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교육·과학                     | ▶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               | 255    | 120    | △135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구조                      | ▶ 벤처기업 ▶ 지식산업센터(사업시행자)        | 712    | 454    | △258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수송·교통                     | ▶ 국가철도공단 부동산 ▶ 물류단지           | 168    | 108    | △60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·지역                     | ▶ 산업단지 ▶ 한국산업단지공단             | 1,855  | 1,688  | △167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공공행정                      | ▶ 마을회 소유 부동산·임야               | 106    | 105    | △1     |
| 종료<br>(16건)          | 소 계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6    | -      | △506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농·어업                      | ▶ 농협·신협 등 농어업인 용자 담보물 등기      | 149    | -      | △149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▶ 농어촌공사 무상양여 토지               | 2      | -      | △2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사회복지                      | ▶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(매각·임대 목적)      | -      | -      | -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구조                      | ▶ 지역신용보증재단 ▶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     | 2      | -      | △2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국토·지역                     | ▶ 외국인투자기업 부동산                 | 24     | -      | △24    |
| 공공행정 등               | ▶ 재외외교관자녀 기숙사 ▶ 조합법인 과세특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29    | -      | △329   |